

요약

개인의 경우 그동안은 자연재해가 개인 차원에서 대비해야 하는 주요 위험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나, 기후 변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게 되면 향후에는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개인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주요 위험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.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시장 기회가 주어짐과 동시에 위험관리자 및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더 큰 책임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술력 제고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. 정부의 경우에는 홍수재해 대비에 있어서 개인이나 보험산업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 손실 분담 및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
-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는데, 이러한 기상이변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
 - 서울 동작구의 경우 8월 8일 오후 9시 5분에 시간당 141.5mm의 강수량을 기록함으로써 기존 서울지역 역대 시간당 최대 강수량 기록(1942년 8월 5일의 118.6mm)을 갱신했음¹⁾
 - 유엔 산하 IPCC(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)의 기후변화보고서²⁾ 폭염, 폭우, 가뭄과 같은 극한의 기후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
- 본고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 형태 변화가 홍수재해 대비와 관련하여 개인, 보험산업, 그리고 정부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
- 먼저, 개인의 경우 그동안은 자연재해가 개인 차원에서 대비해야 하는 주요 위험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나, 향후에는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개인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주요 위험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
 - 현재는 사후 복구 재원으로 정부의 재난 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, 이재민의 완전한 복구에는 한계가 있음
 - 최근 한 보도에³⁾ 의하면, 특별재난지역에서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차상위계층이 재난 발생 1년 후에 7.2%, 2년 후에는 13.9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

1)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의 방재기상관측자료; 서울연구원의 서울인포그래픽스에서 재인용함

2) IPCC(2021), *Climate Change 2021: The Physical Science Basis*,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, Cambridge University Press

3) MBN(2022. 8. 23), “[재난 그 후①] ‘고사리 팔아 생계유지’…재난 지역 빈곤층 증가 2배 높아”(MBN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11개 지역의 근로와 재산형태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음)

-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재해의 빈도와 심도가 증가하게 되면 홍수재해의 사후 복구에 있어서 국가 재정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고, 보험 가입 등을 통한 개인 차원 대비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고령화의 경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공사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듯이, 홍수재해의 경우에도 사후 복구 재원 조달에 있어서 정부와 개인의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

○ 두 번째로,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시장 기회가 주어짐과 동시에 위험관리자 및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더 큰 책임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됨

- 보험산업이 개인이나 정부 등 다른 주체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위험 평가로, 자연재해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해서 개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
 - 각 개인이 처한 위험은 대개 보험료의 수준을 통해서 전달됨
- 보험산업이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관련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해 자연과학 기반의 위험평가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
 - 독일 뮌크리는 회사 내에 과학연구 부서(Scientific Research Unit)를 신설하고 기상학자와 지질학자를 고용해 자연재해 관련 위험 예측 방법론을 개발했음⁴⁾

○ 마지막으로, 정부의 경우에는 홍수재해 대비에 있어서 개인이나 보험산업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 손실 분담 및 보험료 간접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
- 홍수재해의 사후 복구에 있어서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 있어서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
- 먼저, 공급 측면의 경우 거대위험인 홍수 위험은 개별 보험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손실을 분담하는 민관협력체계(Public-Private Partnerships)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⁵⁾
 - 허리케인 피해가 심한 미국 플로리다 주의 경우 Florida Hurricane Catastrophe Fund를 만들어서 민영보험회사의 손실 가운데 일부를 이 기금을 통해 보전해주고 있음⁶⁾
- 수요 측면의 경우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 지원이 필요한데,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2가지 방식이 존재함
 - 직접 지원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이고, 간접 지원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시설 투자 등을 유도함으로써 위험이 감소하여 보험료가 인하되는 방식임
 - 간접 지원 방식에는 ① 위험완화 수단에 투자할 경우 정책금융을 통해서 장기대출, ② 위험완화 시설투자 대출금

4) 독일 뮌크리의 기술력 제고 노력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; 임준(2021), 『재보험산업 발전 정책방향』, 이슈보고서 2021-16, 보험연구원. 임준(2021)은 독일 뮌크리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참고했음; Christopher Kopper(2017), "From Actuaries to Scientific Research: The Evolution of Risk Assessments at the Munich Re" in *Highlights on Reinsurance History*, edited by André Straus and Leonardo Caruana de las Cagigas, P.I.E. Peter Lang

5) 재난보험 관련 민관협력체계의 다양한 해외사례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; 송윤아·홍보배(2021), 『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연구』, 이슈보고서 2021-04, 보험연구원

6) Terrence Dopp(2021), "Public-Private Partnerships Bring Solutions to Covering Emerging Risks Worldwide", *Best's Review*, Volume 122, Issue 11, A.M. Best

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(Voucher) 발급, ③ 홍수 대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, ④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해저축계좌(Disaster Savings Account) 도입 등이 있음⁷⁾

- 위험에 대한 근본 대책은 위험 자체를 줄이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간접 지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

7) 보험료 간접 지원 방식의 미국사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; 임준·이상우·이소양(2018), 『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』, 연구보고서 2018-21, 보험연구원. 임준 외(2018)는 보험료 간접 지원 방식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참고했음; National Research Council(2015), *Affordability of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Premiums: Report 1*, The National Academic Press